

울산시, 자유무역지역 지정 총력전

울주군 청량면 40만평 지정 요구 ... 정부는 낙후지역 우선지정 방침

울산시가 정부의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울산시에 따르면, 울주군 청량면 일대에 조성할 신산업단지 132만2000여㎡(40만평)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2007년 초에 <울산 자유무역지역 추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실무추진단> 등 3개의 추진조직을 각각 구성할 계획이다.

추진위원회는 자유무역지역 지정 추진방향 설정과 시민의 역량을 결집하는 일을 맡고, 실무위원회는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지정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며, 실무추진단은 각종 실무와 준비를 담당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추진조직의 활동을 바탕으로 2007년 7월께 정부에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재신청해 지정을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울산시는 2003년 1월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건의했으나 무산되자 곧바로 타당성 용역에 들어가 개발여건과 입주수요, 경제적 타당성 등이 충분하다는 결론을 이끌어 냈으며, 11월에는 심포지엄을 열어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이와 함께 9월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의 정책간담회에서도 건의했으며, 12월 21-22일에는 산업자원부가 주최한 제1차 기업사랑협의회 전국 네트워크 총회에서도 필요성을 역설하고 산자부 관계자들과 협의하는 등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울산시가 바라는 자유무역지역은 신산업단지로 고시된 울주군 청량면 용암리 일대로 지정되면 첨단 외국기업을 유치해 지역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이루면서 연평균 3183명의 고용유발과 3160억원의 생산유발, 1243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해 낙후지역을 우선 지정한다는 방침에 따라 2002년 전남 대불과 경남 마산, 2005년 전남 울촌과 강원 북평에 각각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한 후 당분간 추가지정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신 성장산업을 유치해 세계 경제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첨단 외국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필수”라며 “정부가 성공 가능성이 확실한 울산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모아 건의하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2/28>